
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연구 결과 보고

2012. 12



보 건 복 지 부
사회서비스정책과

I | 보고 배경 및 개요

- 처우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돌봄 종사자에 대한 「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」 결과를 보고드립니다
-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 현황 파악 및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

□ 연구 개요

- 연구 기간 : '12년 4월~10월
- 연구 기관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
- 주요 연구 방법
 - 돌봄 바우처 종사자 실태 파악을 위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제공기관 대상 **E-mail** 조사 실시
 - 공공-민간 유사 직종 종사자(민간 가사관리사, 산후관리사 등)와 현황 비교 분석 및 일본, 이탈리아 등 해외 선진국 사례 조사

II | 종사자 처우 결정 요인

□ 정부 정책에 기반한 종사자 처우 결정

- 서비스 시간당 가격*(단가)이 정부 재정 및 사업지침에 의해 결정되어 돌봄 종사자 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
 - * 가사·노인돌봄 9,200원, 장애인활동지원 8,300원, 산모도우미 7,300원('12년 기준)
- 서비스 단가 **75%** 이상을 종사자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**25%**를 운영비로 배분하도록 사업지침에 규정
-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**4대 사회보험 가입, 퇴직금, 배상책임보험** 등에 관한 내용을 사업지침별로 명시

□ 돌봄 종사자의 낮은 처우 발생 요인

- 정부 재정 제약에 따른 **3년 간 서비스 단가 동결**로 종사자 실질 임금 하락
- 4대 보험 기관부담금, 퇴직적립금 등 높은 인건비 지출로 인해 기관 운영비 확보가 어려움
- 단일 시급제 임금체제로 인한 기본급 외 수당, 근속수당 미비
- 직무 외 가사노동 요구, 폭언, 성희롱 등에 따른 종사자 직무 불만족

Ⅲ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 현황 분석

□ 제공기관 현황 분석

- **(수익성)** 돌봄 바우처 제공기관은 연 매출액 중 **77.2%**를 직접 인건비로 지출하고 기관당 영업이익은 **1%** 수준
 - (노인돌봄·가사간병·장애인활동지원) 2개 이상의 사업(유사 사업 포함) 병행을 통한 기관 **규모화**로 영업이익 확보
 - (산모도우미) 제공기관의 민간 시장 공략 위한 품질 보증 차원에서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고 영업이익은 민간 사업 통해 조달
- **(인건비 구성)** 주휴수당, 교통비 지급(40~50%내외)에 비해 식대, 초과근로수당(연장·야간·휴일) 지급(10~20%내외)이 낮음
 - 종사자는 교통비, 식대와 더불어 근속 수당 지급을 희망
- **(4대 사회보험)** 가입 해당자의 가입률은 약 **85%** 수준
 - 주요 미가입 이유는 가입기준인 월 **60시간** 근무시간 확보가 미흡
- **(복리후생)** 명절지원, 우수직원 포상, 야유회 등은 실시율이 높으나(50~60% 내외), 휴가, 상조지원, 병가 및 휴직 등은 낮음(30~40%내외)

□ 돌봄 서비스 종사자 임금 수준 분석

- 돌봄 종사자 순임금(4대 보험 본인부담금 제외)은 '12년 최저임금* 대비 100~138% 수준

* 최저임금은 4대 보험 본인부담금 등 복리후생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('12년 기준 4,580원)

- 가사·노인돌봄은 6,345원(138%), 장애인활동지원 5,743원(125%) 수준
- 산모도우미 5,031원(110%), 아이돌보미 4,598원(100%)

- 민간 가사관리사*와 순임금 대비 시 사업별로 59.9%~82.6% 수준

* 반일제 가격(35,000원/4시간) 기준으로 알선수수료 및 4대보험 부담금 제외한 순임금 7,680원

- 가사·노인돌봄 82.6%, 장애인활동지원 74.8%, 산모도우미 65.5%, 아이돌보미 59.9% 수준
- 가사노동을 직무에 포함하는 가사관리사보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 임금 수준이 낮게 나타남

- 경쟁서비스*(유사 사업) 대비 임금 격차 발생

- 직무 분석 결과 가사·노인돌봄·장애인활동지원은 노인재가장기 요양사업, 산모도우미는 유료 산후관리사, 아이돌보미는 민간 베이비시터와 유사

* 노인재가장기요양사업(6,367원), 유료 산후관리사(5,831원), 민간 베이비시터(5,544원)은 사례조사 통해 순임금 산정

- 노인재가장기요양사업 대비 가사·노인돌봄의 임금 격차 비율은 0.3%, 장애인활동지원은 10.9%만큼 발생
- 산모도우미는 유료 산후관리사 대비 15.9%, 아이돌보미는 민간 베이비시터 대비 20.6% 격차 발생

- 3년 평균 최저임금상승률(4.6%) 고려한 임금 수준

- 가사·노인돌봄 약 920원, 장애인활동지원 574원, 산모도우미 729원, 아이돌보미 666원의 시간당 순임금 인상 필요

IV

대응 방안

□ 단기 정책 수단

- 현행 서비스 단가를 향후 9%~24%까지 인상시켜 종사자 임금 인상 추진
 - 아이돌보미 약 20~24%, 산모도우미 14.5~17.6%, 가사·노인돌봄·장애인활동지원 약 10~18% 인상* 필요
- * 사업별 시간당 인건비 및 최저임금 상승률, 유사 직군 단가 및 종사자 희망 단가 등을 고려
- 근무년수에 따른 호봉제 도입, 교통비·식비 및 초과근로수당 등 기본급 외 수당 지급을 반영한 임금체계 검토
- 돌봄 종사자 브랜드네임(가칭 행복도우미) 도입, 우수 종사자 포상, 언론매체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종사자 위상 강화 방안 마련

□ 장기 정책 수단

- (정책 방향) 일본의 사회보험과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을 벤치마킹한 한국의 돌봄 산업 육성이 필요
- (정책 수단) 종사자의 근로자성 보호를 위한 선진국 제도 도입 검토
 -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지침*을 공식화한 일본, 직무별·연공수준별 수당을 지급하는 이탈리아의 제도 도입 고려
- * 방문 개호노동자의 법정 노동조건 확보를 위한 후생노동성 통달문('04.8.27)
- (기관 관리) 일본의 개호노동안정센터*와 같이 종사자 처우 악화에 대응하고 관리하는 전담조직 도입 검토
- * 개호노동자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(92년)에 근거하여 설립
- (기관 육성) 정부의 재정지원을 점차 감소시키고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

□ 돌봄 종사자 임금 인상 통한 처우 개선 추진

- '13년 정부 예산안에 '12년 대비 서비스 단가 3% 인상안 반영
 - 현장에서 임금 지급 가이드라인(서비스 단가의 75% 이상)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현장점검 시 이를 확인
 - 수당 지급을 반영한 임금체계 검토
 - 야간·휴일 서비스 할증단가* 적용 확대, 근무년수에 따른 임금 호봉제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 체계 도입 검토
- *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주간(8,300원)보다 야간·휴일(9,300원) 서비스 제공 시 할증단가 적용 중('12년 기준)

□ 종사자 보호 위한 제공기관 인력관리 강화

- 근로조건 준수,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한 인력관리 안내지침 마련
 - 「근로기준법」,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및 4대 사회보험 관련한 법령 상 내용을 현장에서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함
- 기관이 소속 종사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을 준수하도록 현장점검 시 확인 등 관리·감독 강화